
KDI-HAPI Conference

출장보고서

2026. 08. 28

KDI 산업 · 시장정책연구부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배경) KDI-HAPI 공동연구 개요

- KDI는 1989년부터 매년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이번 컨퍼런스도 2025년에 이어 Hawaii Asia Pacific Institute(HAPI)와 함께 2026년 8월 12~14일 기간 동안 Honolulu에서 진행함.

☐ (출장 목적) 공동연구 Agenda

- 2026년 컨퍼런스는 「Scaling Up Firms and Places」라는 제목으로, Hawaii Asia Pacific Institute(HAPI)와 해외저명 경제학자와 함께 2026년 8월 12~14일 기간 동안 Honolulu에서 진행함.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호놀룰루, 하와이
- 출장기간: 2026년 8월 12~15일

☐ 출장자 (총 5명)

소속	성명	직위
KDI 원장실	김세직	원장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정성훈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KDI 규제연구실	김민호	규제연구실장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이공	연구위원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선함	부연구위원

□ 주요활동

- 2026년 컨퍼런스는 「Scaling Up Firms and Places: Policy for Growth」라는 제목으로, 해외 저명 경제학자(Gordon Hanson, Harvard Univ.; Chang-Tai Hsieh, Univ. of Chicago; Steven J. Davis, Stanford Univ.; ngseok Shin, Washington Univ. in St. Louis; Joseph Kaboski, Univ. of Notre Dame; Francisco Buera, Washington Univ. in St. Louis)와 KDI 연구진의 기업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지역산업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e.g. Promoting Firm Exports: Identifying Causal Effects on Market Entry and Growth, Did Korea's Place-Based Industrial Policy Deliver? Evidence from the Regional Flagship Industry Program, Digital Infrastructure for Urban Consumption Amenities: Evidence from On-Demand Food Delivery Services, Urban Accounting and Spatial Implication: A Case of South Korea)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3 출장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8.12 (수)	22:35~12:25	출국(인천→호놀룰루)	
	11:00~15:00	숙소까지 이동 및 체크인	· Hyatt Regency Hotel
	15:00~18:00	Conference 관련 사전준비	
	18:30~	Opening ceremony	· 참석: 김세직, 정성훈, 김민호, 이공, 김선탐 · 장소: Morton's The Steak House

일자	시간	내용	비고
8.13 (목)	08:30~09:00	Continental breakfast	· 참석: 컨퍼런스 참가자 전원 · 장소: Conference room
	09:00~11:00	Session I: Scaling Up Firms (Chair: Denise E. Konan)	· 발표: Yongseok Shi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정성훈 (KDI) · 토론: Louis Alejandro Rojas-Bernal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1:00~11:50	Session I: Scaling Up Firms (Chair: Sang-Hyop Lee)	· 발표: Joseph Kaboski (University of Notre Dame) · 토론: Kwanho Shin (Korea University)
	11:50~13:20	Lunch	
	13:20~14:30	Session I: Scaling Up Firms (Chair: Sang-Hyop Lee)	· 발표: Francisco Buera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토론: Munseob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4:30~17:20	Session II: Scaling Up Places (Chair: 김세직)	· 발표: 김민호 (KDI), Chang-Tai Hsieh (University of Chicago), 이공 (KDI) · 토론: Liang Wang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8.14 (금)	08:30~09:00	Continental breakfast	· 참석: 컨퍼런스 참가자 전원 · 장소: Hyatt Regency Waikiki Beach, 2424 Kalakaua Avenue (Conference room)
	09:00~11:50	Session III: Scaling Up Places (continued) (Chair: Munseob Lee)	· 발표: Gordon Hanson (Harvard University), 김선탐 (KDI), Steven J. Davis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 토론: Kwanho Shin, Justin Tyndall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Sang-Hyop Lee
	11:50~12:00	Wrap-up	
	12:00~13:00	Closing lunch	· 참석: 컨퍼런스 참가자 전원 · 장소: Hyatt Regency Waikiki Beach, 2424 Kalakaua Avenue (Conference room)

4 활동 내용

KDI-HAPI Conference

□ 일 시: 2026. 8. 12 ~ 8. 15.



2026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Hawaii Asia-Pacific Institute Conference
13-14, August 2026, Honolulu, USA



- 1열: Chang-Tai Hsieh(Univ. of Chicago 교수), 정성훈(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Munseob Lee(UC San Diego 교수), 김세직(KDI 원장), Denise Konan(HAPI 소장), Yongseok Shin(Washington Univ. in St. Louis 교수), Sang-Yeop Lee(Univ. of Hawaii Manoa 교수), 김민호(KDI 규제연구실장)
- 2열: 김선함(KDI 부연구위원), 이공(KDI 연구위원), Gordon Hanson(Harvard Univ. 교수), Joseph Kaboski(Univ. of Notre Dame 교수), Steven J. Davis(Stanford Univ. 교수), Francisco Buera(Washington Univ. in St. Louis 교수), Louis Alejandro Rojas-Bernal(Univ. of Hawaii Manoa 교수), Justin Tyndall(Univ. of Hawaii Manoa 교수), 신관호(고려대학교 교수)

□ Opening Remark, 김세직 KDI 원장

-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주요국 다수에서 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중핵으로 부상하였는데, 그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이 궁극적으로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임임을 강조

□ 주요 발표 내용

- The Dynamics of Technology Transfer: Multinational Investment in China and Rising Global Competition by Yongseok Shi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미국 다국적기업의 대중(對中) 합작투자(JV)가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이 여타 미국기업의 매출·고용·수출을 위축시키는 '비즈니스 스틸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개별기업의 합작투자 유인과 국가 전체의 기술경쟁력 간 상충 가능성에 주목함.
 - 산업별·기업별 미시자료 실증분석과, 과점적 경쟁·혁신·기술확산을 반영한 이국가(two-country) 성장모형을 결합하여 합작투자가 기술확산 속도와 시장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화하고, 모형을 통해 정책 반사실 실험을 수행함.
 - 합작투자에 참여한 미국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성과 시장점유율 이익을 얻으나, 비참여 경쟁기업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시장잠식으로 손실을 입어, 개별기업의 합작투자 유인과 미국 전체 후생 간 괴리로 인해 합작투자가 사회적으로 과잉공급됨을 확인함.
 - 1999년 시점을 기준으로 합작투자를 전면금지하는 반사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미국후생은 1.1% 상승하나 대규모 기술이전 손실을 겪는 중국후생은 8.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기술격차가 클수록 금지정책의 미국 내 순편익이 커짐을 시사함.
 - 다만 20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미·중 기술격차가 이미 상당폭 축소되어 중국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동일한 금지조치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미국기업의 시장접근 기회 상실로 미국후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시행 시점의 기술격차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시사함.

- Promoting Firm Exports: Identifying Causal Effects on Market Entry and Growth by Sunghoon Ch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수출지원사업(EPP)의 효과성 검증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가선택(Self-selection) 및 지원기관의 선별(Cherry-picking) 등 관측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성향점수매칭(PSM) 후에도 사전추세(Pre-trend)가 발생하여 통상적 이중차분법(DID) 적용에 한계가 존재함.
 - 미관측 잠재요인(기대수익성 및 준비도)의 대리변수로 R&D 지출/집약도를 설정하고, 정책의 선행시점(SD_{it+1})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Freyalden hoven-Hansen-Shapiro(2019) 방법론을 도입하여 내생성 및 사전추세 문제를 해결함.
 - 2SLS 추정 결과, EPP 참여는 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 확률을 약 10%p(분석 모형에 따라 7~14%p)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수출 대상국 수를 약 0.12~0.18개국 확대시키는 효과가 최소 6년간 지속됨.
 - 지원 이후 전체 지원기업의 총매출은 4~5년 차를 중심으로 약 2~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EPP는 초기 수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지원기업 중 실제 EPP를 통해 새로 수출에 진입하는 비중이 약 10% 수준에 불과하여 전체 수혜기업 평균으로 측정한 기업 성장 및 규모 확장 효과는 다소 희석되어 나타남.
- Outsourcing Policy and Worker Outcomes: Causal Evidence from a Mexican Ban by Joseph P. Kaboski, University of Notre Dame
 - 노동보호 완화 및 아웃소싱 확대가 기업의 노동시장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강화하여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초래한다는 가설이 학계와 정책당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내생성 문제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인과적 증거는 부족했음.
 - 멕시코 정부가 2021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단행한 아웃소싱 전면금지 조치를 준자연실험으로 활용하고,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

(DID)을 적용하여 임금 대비 한계생산성 비율로 정의되는 마크다운(markdown)의 변화를 개혁 전후로 추정함.

- 개혁 이후 아웃소싱 활용이 급감하고 임금은 약 10% 상승, 마크다운은 약 27% 감소하였으나, 같은 사업체 단위에서 고용량과 산출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아 개혁이 고용 위축 없이 임금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
- 마크다운 감소폭은 개혁 이전 마크다운 수준이 높았던, 즉 노동시장 수요 독점력이 컸던 기업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개혁이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함.
- 다만 동일 기업군에서 투자는 2.8% 감소하고 퇴출확률은 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 기업의 투자유인 위축 및 생존을 저하라는 비용을 수반함을 확인, 노동시장 개혁 설계 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함.

○ Technology Adoption and Optimal Policy by Francisco Buera,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 하에서 기업이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최첨단 기술을 채택할지 여부를 매 기간 선택하는 동태적 일반 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기술채택의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 간 괴리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무수히 많은 이질적 기업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경제를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정식화하기 위해 Mean Field Games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최적 보조금 정책의 형태와 크기를 도출함.
- 경제에는 ① 독점적 경쟁에서 비롯되는 정태적 자원배분 왜곡과 ② 개별 기업의 사적 채택유인이 사회적 최적보다 낮은 데서 비롯되는 기술채택 유인 부족이라는 두 유형의 비효율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둘을 함께 시정하는 시간불변(time-invariant) 생산보조금과 채택보조금의 조합이 최적 정책임을 도출함.

- 기술 간 보완성이 강한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채택 결정이 상호강화되어 총생산함수가 S자형을 띠게 되고, 그 결과 빈곤함정과 풍요함정이라는 다중 정상상태(다중균형)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불변 최적 보조금만으로는 효율적 배분으로의 이행이 유일하게 보장되지 않음.
- 이러한 함정 상황에서는 초기 일정 기간에 한해 추가로 지급되는 한시적 보완정책을 시간불변 보조금과 병행할 때 비로소 저개발함정에서 고개발 정상상태로의 이행을 이끄는 최적 '빅푸시'가 가능함을 규명, 상시적 보조금 수준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저개발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함.

○ Place-Based Industrial Policy without Reallocation: Selection and Effects of Korea's Regional Flagship Industry Program by Minho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015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각각 2~5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 R&D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 대표적인 지역기반 산업정책으로, 본 연구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하여 정책의 산업 선정 기준과 정책 효과를 분석함.
- 지역 및 산업 고정효과를 통제한 분석 결과, 주력산업 선정은 향후 성장 잠재력(Potential)보다는 기존 산업기반(Incumbency)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남. 지역 내 고용 및 사업체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와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정책 시행 이전의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은 선정 여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
-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력산업 지정이 해당 지역·산업의 성과를 개선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처리집단의 선형 사전추세를 허용한 이중차분법(DID)에서는 지정 이후 매출, 부가가치, 유형자산, 고용 및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2015년 이전 추세를 비모수적으로 매칭하는 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D)에서는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두 추정방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자원배분 효율성의 악화로, 처리 지역·산업 내 사업체 규모와 생산성 간 Olley - Pakes 공분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업체 수준 분석에서는 특히 규모가 큰 기존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원이 다수의 기업에 분산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추정치를 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제성과를 훼손한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주력산업 지정과 지원이 해당 산업의 기존 성장경로를 유지·개선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분석 결과는 지역기반 산업정책의 성패가 단순히 특정 산업을 '선정'하는데 있기보다, 지원 대상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좁히고, 경쟁적으로 선정하며, 성과조건과 연계하여 충분한 강도로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함.
- Zoning: Externalities or Misallocation? by Chang-Tai Hsieh,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 주거-상업 용도지역지정제도(zoning)가 인접용도 간 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토지와 경제활동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미국 34개 대도시권과 용도구분이 느슨한 타이베이 부동산·인구·고용 자료를 비교해 근린지구(neighborhood)별 용도구분에 의한 가격괴리(zoning wedge)를 추정하는 공간균형모형을 구축함.
 - 미국 도시의 근린지구는 타이베이에 비해 주거·상업 용도 및 거주자·근로자 구성이 훨씬 더 특화·분리되어 있으며, 미국식 엄격한 조닝규제가 실제로 도시 내 활동의 공간적 분리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용도지역규제에 의한 가격괴리를 타이베이 수준으로 낮추면 토지와 노동의 재배분 효과를 반영한 후생이 평균 9.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규제의 후생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용도규제정책이 산업 간 비교우위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일부 혼합용도를 지향하는 측면도 관측되나 그 설명력은 크지 않아, 실제 정책이 외부

성 교정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주거-상업 활동의 지리적 분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내 대도시의 도시계획 및 용도지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Digital Infrastructure for Urban Consumption Amenities: Evidence from On-Demand Food Delivery Services by Gong Le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배달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물리적 시설의 추가 공급 없이도 서비스의 실질적 접근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시 인프라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함.
- 플랫폼 도입에 따른 업체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기존 보행권인 1km 밖의 신규 소비자 유입에서 발생하고, 특히 1 - 3km 거리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배달플랫폼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음식점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디지털 서비스가 기존 오프라인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종의 보완적 인프라(compensating infrastructure)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생활SOC 및 상업·서비스시설 정책에서도 모든 지역에 동일한 물리적 시설을 공급하는 방식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장벽 완화,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향후 도시정책에서는 교통망이나 시설 입지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플랫폼, 물류, 통신 등 디지털 기반의 접근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

- Place-Based versus People-Based Policy Responses to Local Economic Distress by Gordon Hanson, Harvard University and NBER
 - 지역 노동시장이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충격과 같은 대규모 수요충격에 전국 노동시장보다 훨씬 더디게 적응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경기침체 시 복지정책 등 통상의 인적기반(people-based) 정책과 지역기반(place-based) 정책에 의한 자원배분이 실제로 지역경기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 대침체기(2007~2009년) 전후 미국의 사회보험·복지급여 및 중소기업 대출보증·투자세액공제·지역대학 지원 등 수십 개 정책 프로그램의 카운티 단위 자금배분 자료를 구축하고, Bartik 도구변수 기반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적용하여 지역별 실업충격에 대한 각 정책의 인과적 반응을 추정함.
 - 실업보험, 푸드스탬프 등 사회보험·복지급여와 같은 인적기반 정책은 실업이 급증한 지역에 자금이 뚜렷하고 신속하게 더 배분되어, 경기가 악화될수록 지원이 늘어나는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패턴을 보임을 확인함.
 - 반면 중소기업 대출보증, 투자세액공제, 지역대학 지원 등 지역기반 정책은 실업충격이 특히 컸던 지역에서 오히려 자금배분이 축소되거나 충격 크기와 무관하게 무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정작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과 지역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확인함. 이는 장소기반정책이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인적기반 및 장소기반 정책이 개별적·집합적으로 경기변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무반응의 원인은 지역기반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재정과, 재량적 심사를 거치는 민간 금융·중개기관에 의존하는 전달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기 시 지역기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원조달 방식과 전달체계 자체를 경기역행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함.

○ Urban Accounting and Spatial Implications: A Case of South Korea by Sunham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가 지역 간 생산성 격차와 어메니티(주거·환경 매력도) 격차 중 어디에 주로 기인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인구분포가 후생 관점에서 최적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 한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Desmet and Rossi-Hansberg(2013)의 도시 회계모형을 적용하여 각 지역의 인구 규모를 생산성(TFP)·어메니티·과잉 혼잡비용 세 요인으로 회계적으로 분해하고, 집적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인구분포와 실제 인구분포 간의 괴리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2005~2019년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는 어메니티 격차의 확대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의 확대(같은 기간 수도권 TFP +20.0%, 전국 평균 +16.1%)에 주로 기인하며, 특히 2010년대 들어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 수도권 집중 심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수도권 인구비중을 예컨대 46%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생산성을 약 8%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단순한 인구 재배치보다 비수도권 생산기반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수치로 보여줌.
- 다만 집적외부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인구분포를 계산하면, 오히려 대도시권으로의 추가적인 인구 재배분이 후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후생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표가 상충할 수 있으며, 압축도시 등 집적을 목표하는 공간정책이 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Work from Home and Fertility by Steven J. Davis,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 재택근무(WFH) 확산이 근로자의 통근시간 절감과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 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38개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설문(G-SWA), 미국 설문(SWAA), 미국 인구조사(CPS) 자료를 결합하여, 개인의 실제 재택근무 빈도 및 직업별로 결정되는 재택근무 가능성과 실현·계획 출산율 간의 관계를 다양한 표본과 방법으로 추정함.
- 주당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실현·계획 출산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으며, 특히 부부가 모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생애 출산율이 여성 1인당 0.32명(38개국 평균), 미국 기준 0.45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인의 재택근무 실행 여부뿐 아니라, 해당 직업이 애초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인지, 즉 직업별 재택근무 기회 자체가 확대되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근무의 잠재적 가용성 자체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 한국·일본처럼 직업구조상 재택근무 비중이 낮은 국가가 미국·영국·캐나다 수준으로 재택근무 가능 직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출산율이 4~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재택근무 확대가 별도의 현금성 지원 없이도 활용 가능한 저출산 대응 정책수단이 될 잠재력을 지님을 시사함.

□ 기업 스케일업의 유인구조와 제약조건에 관한 논의

- 실증연구들에서는 기업 지원정책이 "진입"은 촉진하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의 수출·기술·노동시장 정책 전반의 유인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시사함.
- 한국 수출지원제도 자체의 평가에서도 참여기업의 수출확률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매출 증가가 미미하고 부가가치 효과는 없어, 해외진입장벽 완화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성장 연계형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및 합작투자가 증가하는 바, 미국 기업들의 대중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개별기업의 기술확보 유인과 사회적 최적(과잉투자 방지) 간 괴리는 특히 전략산업 관련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 단, 산업정책을 통한 대규모 개입(빅 푸시)이 작동하는 거시경제적 조건이 제한적이므로 한국 경제의 현황, 특히 우리 기업들의 기술수준에 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진단이 대규모 산업정책을 지지할 경우, 단순한 예산 확대편성보다 선별적·한시적·집중적 빅푸시 방식으로 설계된 산업정책이 필요함.

□ 장소기반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논의

- 장소기반정책이 대상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평가·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용도지역지정과 같은 장소기반 규제정책은 대상지역과 국민경제 모두의 효율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이 때, 대중교통 혹은 배달플랫폼 등 상품과 인력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그 효과를 완화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목표 하에서 발생하는 상충을 다른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
- 장소기반정책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자원이 제약되어 있을 때 이들 목표를 위한 수단이 상충할 수 있음. 가령 낙후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드시 경기 침체 시 해당 지역의 경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을 수 있음. 이는 균형발전정책 등 우리나라 공간정책이 목표 및 수단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함.